

# 표문화전당, 안정적 운영 예산·한국대표 문화기관 위상 확보

## 정부기관화 성과와 개정안 내용

인건비·경비·사업비 지원 의무화  
조직 구성·개관 작업 등 탄력  
지역문화계 “정부 운영 5년은 짧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문화전당 특별법)이 3일 국회를 통과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정부 소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게 됐다. 현재 운영중인 아시아문화개발원(특수법인)은 ‘아시아문화원’이라는 공공기관으로 성격을 바꿔 문화전당의 일부 업무를 위탁받게 된다.

지역민들은 법안을 바탕으로 구성된 문화전당 전당 기구, 인력선발 등 후속작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행자부와 기재부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이 문화전당을 정부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남다른 의의가 있다. 국책사업으로서 문화전당의 위상을 재확인 하는 것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정부의 문화기관을 대표하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개정법안에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한 점을 반기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이와 달리 ‘지원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화전당은 운영비 등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원 외에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하도록 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 해당 예산은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위해 외교부가 편성한 예산이다. 하지만, 해당법안의 부칙에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위탁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소 10여년 동안 정부가 운영해야 문화전당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지역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같은 지역문화교류후진상태 상임이사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이 지난 12월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서 퇴보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정부가 문화전당 운영 인력 선발 후속조치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성명에서 “아특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법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문화전당 운영조직 출범 및 문화콘텐츠 구축 등 개관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문화전당 개관(오는 9월4일)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당 채움 콘텐츠 구축 서둘러야 운영조직 구성·인력 선발 지원 절실

### 문화전당 9월 개관 남은 과제는

문화전당 건립과 개관책임지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은 금명간 문화전당을 운영할 국가기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꾸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이 지난해 8월 공개한 ‘문화전당 운영계획’에 따르면 문화전당은 6개 본부, 4명의 예술감독, 연구소·센터 등 3곳을 두는 조직 체계로 꾸려진다. 인력규모는 423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진단은 이날 아특별이 통과함에 따라 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소속 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구성하고, 현재 아시아문화개발원(특수법인)을 ‘아시아문화원’(공공기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인력의 선발규모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인력)와 기획재정부(재정)가 쥐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협조 없이 문화부 자체적으로 문화전당 조직 구성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부처가 난색을 표명할 경우 문화전당의 필수인력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문화전당 운영조직 체계와 인원은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문화부에서 조직구성안을 만들어 안행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르면 4월께나 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들이 불과 6개월만에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있다. 문화전당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보다 규모가 큰 대형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을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개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문화전당을 채움 콘텐츠(전시·공연 등 운영프로그램) 구축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최근 문화창조원(문화전당 5개월 가운데 하나) 예술감독과 계약을 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문화창조원에 접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전임감독의 프로그램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본관, 별관, 회의실, 경찰청 본관 등 6개)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개관을 불과 6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문화계의 한 전문가는 “물리적으로 빠른 시간 때문에 문화전당이 졸속개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문화전당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해서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전당 성공적 개관 만전 기해야 국가지원 꾸준히 압박하고 감시할 것”

### 국회통과 일등공신 박혜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갑)은 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박 의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향후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기틀이 될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18개월 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협상을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출범 및 개관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은 직제와 인력을 구성하고 아시아문화개발원 등에 위탁한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운영의 일부만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전당이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또 애초 개정안의 (필요한 경비) “지원하여야 한다”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지원처와 법제처 등에 확인해 본 결과, ‘지원한다’도 ‘지원하여야 한다’처럼 강행규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 박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에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낸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또한, “수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힘을 모아주시는 박주선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설촌 위원장과 김태년 간사, 광주시·구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및 광주시민께도 감사 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력에도 감사를 전했다.

박 의원은 “이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은 물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압박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도 광주시민과 함께 문화전당을 아시아 최고로 만들고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